

2017. 10. 16. [월] 정무위 시작시(10:00)부터 보도가능

제354회국회(정기회)

국 정 감 사

## 업 무 현 황

2017. 10. 16.

##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I. 2017년도 예산집행사항 .....	1
II. 2017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 .....	3
III. 2016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2
IV.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71
V.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8
VI. 기타 사항 .....	91

## I . 2017년도 예산집행사항

### □ 2017년 예산집행현황('17.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예산액*	지출액
<b>1. 인건비</b>	<b>23,330</b>	<b>16,541</b>
<b>2. 기본경비</b>	<b>7,436</b>	<b>5,321</b>
<b>3. 사업경비</b>	<b>202,699</b>	<b>131,731</b>
· 자금세탁방지추진	547	346
· FATF 교육·연구기구 운영 지원	2,256	2,256
·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4,849	3,317
·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1,105	924
·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1,000	0
· 금융의 날 행사	77	14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41,542	41,542
· 금융소비자보호	146	58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해운보증기구)	65,000	0
· 산업은행출자(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	80,000	80,000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13	388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79	34
· 정책연구개발	587	129
· 금융정책알리기	345	197
· 자본시장조사단 운영	705	126
· 국제중재수행	3,948	2,400
<b>4.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b>	<b>1,800,000</b>	<b>1,500,000</b>
·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전출금	1,800,000	1,500,000
<b>합 계</b>	<b>2,033,465</b>	<b>1,653,592</b>

\* 전년도 이월(51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임

## Ⅱ. 2017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

### 목 차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5
2.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확대 .....	7
3.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금융업 혁신 .....	11
4.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 .....	13
5.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	16
6.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	18
7.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및 대응 .....	19
8. 금융부문 쇄신 .....	20

## II.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

###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가 창업·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금융 개편

##### 추진 배경

-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생산적 분야로 시중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여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뒷받침

##### 추진 내용

-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
  - 기술평가 내실화 노력을 통해 은행 여신심사에 기술력을 반영하고, 특허권 등 동산담보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17.下)
  -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채무조정·자금지원 등 재기지원 강화('18.上)
    - \* ('17.8월) 신보 등 공공기관의 연대보증폐지 대상 확대(창업 5년 이내 → 7년 이내), ('18.上)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해 신보 등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전면 폐지 추진
-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 정책금융의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정책금융기관간 기능 조정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효과 제고('17.下)
    - \*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행 20조원 수준에서 '21년까지 40조원 수준으로 확대
  -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17.下)

##### 향후 계획

- 현장의견 수렴, TF 등을 통해 세부방안 마련(연내)

## 나 자본시장 혁신

##### 추진 배경

- 자본시장이 기업성장,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하여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 도모
  - 자본시장 혁신 3대전략을 추진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고객중심 시장을 조성

##### 주요 내용

- 코스닥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등 Start-up들의 Scale-up을 지원 하는 성장자본 공급 위주로 시장 시스템을 재정비
    - \* 예) 코스닥시장·장의 중간회수시장 기능강화, 사모펀드·투자은행 육성 등
  - 자산운용시장 성장의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
    - \* 예)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 '좋은 펀드'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고 등
    - 운용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 등 자산운용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레이어 육성
      - \* 예) 실물자산 공모 재 간접펀드 운용규제 완화, 펀드 패스포트 추진 등
  - 투자위험과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 회계법인 등이 기업정보를 왜곡없이 전달하는 체계 확립
    - \* 예) 외부감사인 지정제 확대, 감리주기 단축 등
    - 새도우보팅을 예정대로 폐지('17년말)하여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계기 마련
    -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처벌 강화
- ##### 향후 계획
- 각 전략별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세부과제를 논의하고,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연내 방안 마련

## 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 추진 배경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해 서민·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 증대, 자활 확대 등 포용적 금융 추진
  - 서민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
    - \* 서민금융은 비용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채무조정을 통한 연체자 재기로 경제활력 제고 가능

## 주요 내용

- 카드수수료 및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
  -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범위 확대(여전법 시행령 개정, '17.7.31)
    - \* 영세가맹점 :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2~3억원 → 3~5억원
  -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 추진
- 지속적인 중금리 대출 공급,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재원 확보 및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강화로 서민금융의 질적 개선 유도
  - 사잇돌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17.9월까지 1조원 공급)하고, 중금리 대출 관련 인센티브 제공, 정보제공 강화 등 지속 추진
  - 진흥원(햇살론) 보증계정 확대·개편 방안 및 진흥원·신복위·미소금융 개별재단 등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 추진

## 향후 계획

- 대부업·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 시행\*('18.1월)
  - \* 시행전 저신용자 자금이용 애로 등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 보완대책 마련 예정
-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 현황 점검(연내)
- 서민금융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전문가 의견 수렴(연내)

## 추진 배경

- 장기간 추심에 시달린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기 지원으로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하고 경제활력을 제고
  - 그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가 다수 존재하며, 채무조정외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연체자도 지속 발생
    - \* '17.8월 기준 국민행복기금 매입채권 중 미약정자는 101만명

## 주요 내용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즉시 소각 추진
  -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보유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17.8월)
    - \* 9.1일부터 신청원 통합조회시스템 및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무자가 본인 채무의 소각 여부 확인 가능
  - 민간 금융권 보유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연말까지 자율적 소각 유도
- 국민행복기금 보유 잔여채권의 적극적인 정리
  -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장기소액연체자\*, 기타 연체자, 기존 약정자 등 채무자 특성에 따른 정리 방안 마련
    - \* 미약정자 중 10년 이상 1천만원 이하 연체자 약 40.3만명
- 민간 보유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정리
  - 국민행복기금 외 대부업체, 금융회사 등 민간 보유\*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방안 마련
    - \*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적극적 정리 병행

## 향후 계획

- 장기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발표(연내)

## 다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

### 추진 배경

-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노력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

###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지속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① (사전정보제공)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등
  - ② (판매규제) 6대 판매행위 규제체계 마련(적합성·적정성 등), 현저한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시 판매금지 명령권 도입 등
  - ③ (사후권리구제) 금융소비자 입증책임 완화(의무 위반시 고의·과실 여부를 금융회사 입증), 소액사건에 대한 금융회사의 조정절차 이탈 금지 등
- 과잉대출·고금리대출로 인한 금융소비자피해 최소화
  - 대출모집인의 불건전행위 규제 강화·설명 의무 확대 및 대부업 광고규제 강화 등 추진
- 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노력 강화
  - 금융상품 가입계약 해소, ATM 등 이용 편의성 제고, 금융이용 피해 방지 등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

### 향후 계획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제정 추진\*
  - \* 현재 정부안(5.23 제출)과 함께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
- 대출모집인·대부업 광고규제 강화방안 및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

## 라 공정한 채권추심 관행 확립

### 추진 배경

- 불법·부당 추심으로 인한 채무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채권 추심 관련 규제 정비 등을 통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

### 주요 내용

- 채권자 측(금융회사·추심업자 등)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추심 대응 능력을 높여 공정한 채권추심 관행을 확립
  - ① 불법·부당한 추심이 근절되도록 추심행위 및 위탁관련 규율을 정비하고 검사·감독을 강화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시행(금융회사·주요 대부업자 대상)
      -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 과도한 추심행위 제한 등
    -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위탁 금지 및 추심인에 대한 추심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의 법제화\* 추진 중
      - \* 「신용정보법」 개정안(지상욱의원) 국회 정무위 통과(9.21일, 법사위 계류)
  - ②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시행(금융회사·주요 대부업자 대상, '17.4월~) 등으로 채권 매각과정에서 채무자 권익 보호
    - \* 내부통제기준 마련, 매입처에 대한 실사(규제 준수 등 확인),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매각제한, 채권서류·정보 제공, 매입처 사후 관리 등
  - ③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도입('17.4월)하여 채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추심 대응능력 제고
    - \* 채무자가 대출채무 등의 채권자 변동, 시효완성 등을 손쉽게 확인 가능

### 향후 계획

- 채권 추심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지속)

### 3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금융업 혁신

#### 가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 마련

##### 추진 배경

-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 도모
  - 첨단산업과의 융합 등 금융의 빠른 혁신을 지원함과 동시에 파괴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

##### 주요 내용

- ☐ 창업·혁신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ICT 플랫폼 확산\*\*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 추진
  - \* '15년 4,030억원 → '16년 9,138억원 → 향후 3년간 3조원 수준으로 공급
  - \*\*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16.8월) → 개별 금융회사 오픈 API 활성화
- ☐ **全 금융분야에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금융산업의 역량을 강화**
- ☐ 신용정보원 등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후 창업·핀테크 기업 등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 빅데이터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 조치**에 대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
    - \* 비식별 적정성 평가 및 비식별정보의 재식별 금지 의무화 등
- ☐ 금융-IT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 혁신 사업자에 대해 **시범인가, 규제면제** 등을 통해 시범영업 허용
    -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해 현재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가능
  - 소비자群 한정,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 향후 계획

- ☐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 발표 추진(연내)

### 나 진입·자본규제 혁신

##### 추진 배경

- ☐ 우리 금융시스템이 보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큰 틀을 개편
  - 신규 참가자의 진입 촉진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전규제 등 진입장벽 개선
  - 시중자금이 가계·부동산이 아닌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 유인체계 재설계

##### 주요내용

- ☐ 신규진입 정책을 비롯한 **인가요건·단위 및 절차 등 인허가 시스템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
  - 각계 전문가의 금융업권별 경쟁도 분석 등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신규 진입정책 추진체계 구축**
  - 금융권별 인가단위·요건 등 진입장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가 절차의 투명성·신속성·합리성 등 제고
    - \* (예) 업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인가단위 재설정, 인가요건·기준 구체화·명확화 등
- ☐ 가계금융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자본규제를 개선**하고, **특정 분야 자금쏠림**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 부동산 PF,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규제 부담을 강화하고, 업권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리스크 관리체계 정비**
    - \* 가계부문 등 특정 분야 편중위험을 평가·반영하여 추가 자본적립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보완
  - 동산담보대출,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금융 분야**에서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제**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

##### 향후 계획

- ☐ 진입·자본규제 개선방안 마련(연내)

## 4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

### 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구축

#### 추진 배경

- 현행 업종별 규제와 회사별 감독으로는 **금융그룹내 위험전이 및 이해상충 등 그룹 위험요인의 관리에 한계**
  - 그간 금융산업의 **대형화·점업화** 확대로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동일 지배력으로 연결된 **금융그룹의 수와 규모가 지속 증가\***
    - \* 금융그룹 추이 : '05년 34개(총 125개사) → '16년 43개(총 192개사)  
금융그룹의 총자산 3,734조원 (금융회사 전체의 83%)
  - '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통합감독을 시행중이나, **금융지주 외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이 미흡\***
    - \* '13년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이종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주요 내용

-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감독체계를 구축
  - \* 선정기준(예시) : 은행·보험·금융투자업·비은행 중 최소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전체
- ①**금융그룹 단위 자본적정성 규제**, ②**대표회사 중심 그룹위험 통합 관리시스템**, ③**그룹 차원 위험한도 설정, 내부거래 제한 등\***
  - \* 그룹단위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주식취득 한도 설정, 그룹내 불량자산('요주의' 이하) 거래 금지 등

#### 향후 계획

- 공청회 논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마련(연내)

## 나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지원

#### 추진 배경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중장기적 가치 제고 등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16.12월)
  - \*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원칙과 기준
- 현재 **8개 기관**(자산운용사 1, PEF 6, 의결권 자문사 1)이 **참여중**이며, 56개 기관이 참여예정임을 공표(10.11일 기준)

#### 주요 내용

- 기관투자자의 활동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노력 지속
  - 공시의무\*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 우려 등과 관련한 **법령해석 제공**(6.9일)
    - \* 5% 이상 주주는 주식 보유목적에 '단순투자' 또는 '경영참여'로 공시해야 함
-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자산운용 위탁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자산운용사에 가점 부여**
  - \* 산업은행·기업은행·증권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은 既 시행중('17.2분기)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적 연기금의 선도적 참여 유도**
  - \* 기재부는 연기금의 참여 확산을 위해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반영 예정('17.10월)
  - \* 국민연금은 코드 참여 관련 연구용역중('17.7~12월)

#### 향후 계획

-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지속)
  -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 제도개선 요구 등에도 신속 대응



## 다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추진 배경

- 회계투명성·신뢰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회계산업 선진화를 위해 감사인 독립성 제고, 기업의 책임 강화 등 추진

### 주요 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회통과(9.28일)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을 확대\* 하는 한편, 비감사용역(컨설팅 등) 수입 제한\*을 강화
  - \* 상장회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사에 대한 주기적(9년 중 3년)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 \*\* 금지대상으로 자금조달 관련 중개업무를 추가하는 등 금지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규제범위를 피감회사의 종속회사까지 확대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법규화\*\*
  - \* 상장사 감사는 품질관리 등 일정요건 충족 회계법인에만 허용
  - \*\*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 발생 시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조치
-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감사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을 강화\*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를 감사의견에 포함하고, 회사대표자가 제도 운영실태를 주총에 보고
- 감리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회사, 임원 등 및 감사인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 제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 \* 회사: 분식액의 20%이내, 회사관계자: 회사 과징금의 10%이내, 감사인: 감사보수 5배 이내

### 향후 계획

-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하위규정 제정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
  - \*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5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 추진 배경

- 가계부채 질적 구조,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 비추어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 \* ① 부채 대부분(70.2%)을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구(소득 4~5분위)가 보유
  - ②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 충분('17.6월, 연체율 0.25% BIS비율 15.4%)
- 높은 증가세 지속시 가계 상환부담 가중 및 소비위축 등이 우려되는 바, 차주별 맞춤형 대응과 체계적 부채관리 필요

- ◆ 역대 최저수준 금리(한은 기준금리 1.25%),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15~'16년중 가계부채가 두 자릿수로 증가\*하였으나,
  - \* 증가율(%), 한은) : ('13)5.7 ('14)6.5 ('15)10.9 ('16)11.6 ('17.6)10.4
- ◆ 지속적인 관리노력으로 전 업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추세('17.6월말 기준 1,388.3조원, 한은)
  - \* 전 업권 가계신용(한국은행, 조원) : ('16.1~6월) +54.5 → ('17.1~6월) +45.8

### 주요 내용

- ① 부채 중심의 관리에서 소득 증대, 주택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로 전환
  - ①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범정부 체계 마련
  - ② 일자리창출, 주거비·교육비 등 생활비 절감 등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제고
- ② 금융회사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
  - ① 신규 주담대시 차주가 보유한 부채와 소득을 최대한 합리적·포괄적으로 반영하는 新DTI(Debt to Income) 도입\*
    - \* 인정·신고소득에 대한 소득확인 철저, 장래소득 증가가능성 반영 등

②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DSR (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

③ 금리인상 등 부정적 충격 발생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①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제한(1인당 2건 → 세대당 2건) 등 공적 보증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②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 생계형, 경쟁력이 취약한 경우 등 유형별·사업 단계별로 맞춤형 대책 마련

③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객관적 소득증빙 관행 정착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17.3월) 및 이행·관리 여부 지속 점검

④ 취약차주의 연체 사전 예방 및 조속한 재기 여건 마련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자금을 차질없이 공급

① 연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체시 조속한 재기 여건 마련

\* (연체前) 실직·폐업으로 상황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 (연체後)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 강화

② 소멸시효 완성 및 장기소액연체채권 적극 소각·감면

\*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공부문 채권 총 21.7조원(123.1만명) 소각('17.8월) 시효완성 前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상환능력 심사후 적극 감면·추심중단

③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정책 모기지를 개편\*하고, 서민정책자금·중금리 사잇돌 대출 등을 차질 없이 공급

\* 금리인하 등 혜택 확대, 비소구(유한책임) 대출 확대 등

## 향후 계획

□ 관계부처 협의 후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 발표 및 시행

## 6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 추진 배경

□ 구조적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

### 주요 내용

□ 대우조선해양은 산은·수은 주도로 정상화\*를 추진 중이며, 총 5.9조원의 자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17.8월말 2.3조원 이행)

\* '17.4월 모든 이해관계자(노사·채권은행·사채권자)의 손실분담 합의가 완료되어 한도대출 2.9조원(산은·수은) 등 정상화 지원중

○ 산은 주도의 관리체계를 탈피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 정상화 관리위원회」('17.5.8일 발족) 운영을 통해 정상화 지속 추진

※ '17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발생 및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

\* 당기순이익: ('16년)△3.0조→('17.上)+1.5조/ 부채비율: ('16말)5,544%→('17.6월)244%

□ 현대상선은 자구노력 및 손실분담\* 등으로 정상화 기반 마련, 한진해운은 자율적 채무조정 실패 등으로 법정관리 신청 및 파산('17.1월)

\* 자산 매각·사채출연(1.39조), 유상증자(1.44조), 상환유예(1.4조), 용선료 인하(0.2조) 등

○ 해운업 재건을 위하여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등 기 마련된 금융지원 프로그램\*('16.10.31일)을 지속 이행하고, 해수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도 추진

\* 한국선박해양 신설,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캠프 선박펀드, 글로벌 해양펀드' 확대

### 향후 계획

□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의 객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제도 개선(연내)

□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조성, P-Plan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기촉법 상시화('18.6월) 등 제도적 다양성 확보(지속)

## 7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및 대응

### 추진 배경

- 북한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전개양상에 따라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 발생 시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

### 주요 리스크 요인

- 연이은 北 미사일 발사·核실험\*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
  - \* ICBM급(7.28일)·단거리(8.26일)·중거리(8.29일, 9.15일) 탄도미사일, 6차 핵실험(9.3일)
  -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강경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고조될 우려
- 美 연준의 연내 보유자산 축소·추가 금리인상, ECB의 테이퍼링 가능성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
  - 美 연준은 10월부터 보유자산 축소를 개시할 예정이며, 기준 금리도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 그간 '15.12월·'16.12월·'17.3월·6월 네 차례 인상
  - ECB는 자산매입규모 축소 등 통화정책 정상화 계획을 연내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향후 계획

- 금융시장상황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과의 소통·협력 강화
  - 필요시 위기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조치 시행

## 8 금융부문 쇄신

### 가 금융당국 혁신 :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운영

### 추진 배경

- 금융위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
  -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정책추진에 대한 책임성 및 금융회사·금융소비자와의 업무 관행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

### 주요 내용

- 금융위·금감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8.29~)
  - \* 학계·언론·소비자·업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13명, 위원장: 윤석현 교수)
  - 전체회의 4회(8.29, 9.13, 9.28, 10.10), 주제별 분과회의 등 개최
  - ※ 주요 논의주제 : ①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②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③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④ 금융권 업무관행의 개선 등

금융행정혁신위는 그간의 운영현황 및 1차 권고안\*을 발표(10.11일)

\* 금융위·증권위 간건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 인허가 요건 해석시 법제처 등 중립적 외부기관 의견 반영, 금융권 CEO후보추천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

- 추가·세부 권고안은 최종보고서에서 제시 예정

### 향후 계획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 확정·발표(연내)

## 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

### 추진 배경

- 금융회사 중심의 시각이 아닌 **국민들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

### 주요 내용

※ 소비자중심 금융개혁 10대 우선 추진과제(‘17.9.25일 발표)

- **금융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건 마련
  -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연내 방안마련), 실손 의료보험료의 인하 유도(‘18년 상반기중), 금융투자상품·TV모집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관련 제도 개선(연내 방안마련 후 순차적 시행)
-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16년말, 7.6조원/947만건) 등 금융이용자의 숨어있는 자산을 찾아주는 시스템 개발 및 홍보(연내)
- **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되는 지원체계** 마련
  - 재기사업자의 신용회복 지원,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 출시(‘18.4월),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온라인 햇살론 출시(‘18.1월) 등
    - \* 정책지원대상 재기사업자의 불이익한 정보를 신용평가사에도 활용 금지(‘18년)
- **생활 속 금융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OTP 재발급·배터리 관련 불편\* 개선**(‘18.1분기 개선방안 마련), 고령층·청년층·주부 등의 금융 편의\*\* 제고 등
    - \* 재발급시 필요적 창구방문, 배터리 교체 불가로 인한 신규 발급 불편 등
    - \*\* 전업주부에 대한 카드발급·한도부여시 절차·증빙 간소화 등을 우선 추진 (신용카드의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추진, 연내)

### 향후 계획

-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기 발표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추가 과제 발굴**(지속)
  - \* 금융위·금감원 현장점검반, 금융소비자, 개혁과제 소관부서 등으로 구성

## Ⅲ. 2016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 목 차

1. 신속하고 적극적인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관련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로서 금융위의 올바른 역할을 재점검할 것 .....	30
2.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정부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이유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점검대상 선정에서 제외해 왔던 것에 문제가 없는지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감독권한을 행사하여 조사할 것 .....	30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 1호 사례인 동양물산을 대상으로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 특혜의혹이 있으므로 이를 조사할 것 .....	31
4.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표의 적정성 및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절차를 점검할 것 .....	31
5. 실적과 무관한 대규모 성과급 지급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은행 경영평가 개선방안 및 임원 성과연봉 환수방안을 마련할 것 .....	31
6. 해양보증기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32
7. 심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LTV, DTI 규제를 강화하고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 DTI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32
8.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규모 통계가 서로 달라 혼동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33
9. 사전채무조정제도 의무화, 기한이익상실제도 개선, 채권회수기관의 과도한 추심 금지 등 채무자 보호 강화방안 도입을 검토할 것 .....	33
10. 지방자치단체나 채무자단체 등이 수행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재무설계서비스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35
11.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결과를 제출할 것 .....	35
12. 마이너스통장의 체크카드 연계 서비스를 금지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금융위 방침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조속히 확정, 명확히 할 것 .....	35
13. 보금자리론 축소에 따른 주택자금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36
14.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사 간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원만한 도입을 위해 합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36
15. 한미약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금의 환수 방안을 검토할 것 .....	37
16. 자율공시·의무공시 사항 재분류 등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7
17. 공매도 관련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매도 공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공매도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38
18.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지정제도 확대 및 외부감사인 선정방식 보완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39
19.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39
20.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40
21.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 중금리대출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	40
22.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	41

23.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41
2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는지 파악할 것	42
25.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자기손해사정제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검토할 것	42
26. 공공건설공사 손해보험의 재보험요율이 시장논리에 맞게 조정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점검할 것	43
2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의 가입대상 및 세제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3
28.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주택 상속과정에서 배우자의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신탁제도 도입을 통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44
29. P2P 대출시장에서 부당광고행위를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제도를 보완하는 등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	44
30. 유사투자자문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감독 인력·예산 확충을 검토하고 영업 신고요건의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4
31. 병·의원 및 약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	45
32.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공공뱅크 도입, 리베이트 근절 및 수수료체계 개편 등 정책대안들을 검토할 것	45
33.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IC단말기 교체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46
34.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46

35. 한국증권금융이 위탁받은 주식을 활용하여 임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	47
36. 금융위원회가 유관기관들을 동원하여 금융개혁 홍보 및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해당 기관들로부터 파견인력을 과도하게 지원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7
37.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경우 이해상충 소지 및 관(官)에 대한 로비 창구로의 활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 운영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	48
38. 금융위원회 사무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 기관 및 언론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여 보고할 것	49
39.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증권금융 임원이 모두 외부인사로 채워진 점 등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49
40. 금융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금융공공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0
41. 저축은행 TV광고가 광고시간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광고 총량규제 도입을 검토할 것	50
42.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최고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지속 검토할 것	51
43. 대부업체가 이익을 사내유보하기 위해 연체율에 비해 대손충당금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51
44.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신용평가 산정 관련 문제점을 개선할 것	52
45.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있어 타 업권과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52

46.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금융서비스 접근권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53
47. 금융서비스 이용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을 평가하여 장애인 관련 금융정책에 반영할 것	53
48.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53
49. 농협중앙회에 집중된 기능을 단위조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4
50. 헤지펀드와 재벌의 유착관계(삼성-엘리엇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54
51. 전자문서를 통해 주주에 대한 각종 통지가 가능하도록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54
52. 동양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대기업계열별 금융그룹 모니터링 체계 마련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신속히 이행할 것	55
53.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새로 도입된 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증권회사에 과도한 유휴자본 보유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장외파생상품에도 신 NCR 제도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56
54. 불법 주식장외거래 방지대책으로서 K-OTC(한국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56
55.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56
56.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 강화 및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57
57. 삼성물산 합병 및 한미약품 공시지연 등 불공정거래 의혹 제기 사안에 대해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권한을 활용하여 조사할 것	57

58. 실효성 있는 파생상품시장 육성 대책을 마련할 것	58
59. 증권시장에서 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9
60.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매출채권담보대출 도입을 검토할 것	59
61. 금융감독원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안건 범위에 규정 제·개정 관련 안건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9
62. “월세입자 투자폴”의 계약기간이 4년이어서 임대차계약 주기 2년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가입자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60
63. 청년희망펀드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권 실적 쌓기, 대기업 준조세 등의 문제점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	61
64.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부산이전 금융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가족의 현지이주가 부진한 문제와 지역 인재채용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61
65. 금융공공기관이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납부하는 고용 부담금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자가운전 보조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고용을 위한 예산 배정에 노력할 것	62
66.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과 금융노조 파업 관련 상황점검 회의를 갖고, 파업 불참 독려와 근태관리 당부를 하는 것은 합법적 파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이므로 이를 지양할 것	62
67. 금융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퇴직 직전 호적을 변경해 정년을 연장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독을 철저히 할 것	63

68. 대우조선해양의 지구계획 이행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향후 이행 여부를 엄정히 평가하고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63
69. 금융위 주도로 설립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하자과 설립 이후 정부기관의 지속적 개입에 관해 진상을 규명할 것 ..... 63
70. 서민금융진흥원이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65
71. 대우조선해양의 자본잠식과 상장폐지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한 컨틴 전시 플랜을 마련할 것 ..... 66
72. 우리은행이 시중은행으로서 시장논리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한 잔여지분을 조속히 매각하기 위해 노력할 것 ..... 66
73.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67
74. 금융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전심사방식인 현행 약관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정 약관심사기한을 준수할 것 ..... 68
75.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한 이중규제(한국증권금융예의 의무예치, 예금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68
76. 한국거래소의 직장내 성희롱·집단따돌림 피해 여직원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검찰수사협조 등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68
77. 국민연금이 한미약품을 공매도 후 상환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국민연금 주식 대여시기, 상환시기를 파악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 ..... 70

## 2016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시장·처리요구사항	시장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 신속하고 적극적인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관련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업구조 조정 컨트롤타워로서 금융위의 올바른 역할을 재점검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16.6월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로서,</p> <p>○ 경제부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운영중</p> <p>* '16.6월부터 '17.9월까지 12차례 회의 개최</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 및 산업구조 개편 및 미래비전 제시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p>
2.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정부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이유로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을 통한 점검대상 선정에서 제외해 왔던 것에 문제가 없는지 금융위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감독권한을 행사하여 조사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산업은행은 여신지침을 개정('16.4.22, '16.8.11)하여 정부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업체도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일반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후관리 중임</p> <p>* 정부와 산은이 각각 또는 합계하여 과반수 출자(출연)한 업체</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3.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 적용 1호 사례인 동양물산을 대상으로 산업은행이 자금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 특별 의혹이 있으므로 이를 조사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동양물산에 대한 금융지원 등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 등 파악(산업부, 산은 등 의원실 설명)</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R&amp;D 등을 지원하는 산은의 ‘사업경쟁력강화 자금’을 운영취지에 맞게 운영</p>
4.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표의 적정성 및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절차를 점검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엄격하고 공정한 경영평가를 위하여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검토</p> <p>◦ 연구용역 및 지적사항 등을 감안 하여 경영평가 지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17.10월)</p> <p><input type="checkbox"/> 2016년 경영평가부터 경영평가에 참가한 민간위원으로 집필진을 구성 하여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예정</p>
5. 실적과 무관한 대규모 성과급 지급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은행 경영평가 개선방안 및 임원 성과연봉 환수방안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엄격하고 공정한 경영평가를 위하여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검토</p> <p>◦ 연구용역 및 지적사항 등을 감안 하여 경영평가 지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17.10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input type="checkbox"/> 대우조선 문제 등으로 임원성과급을 반납하는 등 실적과 무관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경영평가 등을 강화하겠음</p>
6. 해양보증기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17.8월말 현재 2,628억원을 출자 받아 4,427억원의 보증을 공급(보증 배수 1.56)중</p> <p>* 공공 2,150억원, 민간 478억원</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17년중 공공부문의 추가 출자를 통해 공공부문 출자목표(‘19년, 2,700 억원)를 조기에 달성하는 한편,</p> <p>◦ 해양보증보험은 조선업, 지역업체 등 민자유치 대상을 다변화하는 등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p> <p>◦ 아울러, 신상품 마련, 리스크관리 기반 확립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겠음</p>
7. 심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LTV, DTI 규제를 강화하고 아파트 집단대출에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LTV·DTI 비율을 각각 40%로 강화(‘17.8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대해 DTI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input type="checkbox"/> '17.7.3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된 아파트 사업장의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한 DTI 적용('17.7월) <b>&lt;향후 추진계획&gt;</b> <input type="checkbox"/> 新DTI, DSR 도입 등 여신심사 선진화 지속 추진
8.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가계 부채 규모 통계가 서로 달라 혼동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b>&lt;처리결과&gt;</b> <input type="checkbox"/> 금융당국은 적시성있는 정책 대응을 위해 가계대출 속보치를 수집하고 있으며, 속보치인 만큼 한국은행 통계와는 일부 차이 발생 가능 <input type="checkbox"/> 금융당국 및 한은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 범위를 일부 보완*하였음 *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기관(현금서비스, 카드론)을 금감원 속보치에 포함하여 집계 <b>&lt;향후 추진계획&gt;</b> <input type="checkbox"/>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가계 부채 통계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
9. 사전채무조정제도 의무화, 기한이익상실제도 개선, 채권 회수기관의 과도한 추심 금지 등 채무자 보호 강화방안 도입을 검토할 것	<b>&lt;처리결과&gt;</b> <input type="checkbox"/> 연체전 사전채무조정제도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 보호 강화방안 발표('17.1월, 업무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input type="checkbox"/>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발표('16.11월) <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원에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 채무자들에게 자신의 채권자 현황·변동내역 등의 조회서비스를 제공('17.4.1일 시행) <input type="checkbox"/> 부실채권의 매매 과정에서의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을 마련('17.4월) * 금융회사대부업자가 대출채권 매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업무준칙을 매각 단계별로 제시 <input type="checkbox"/>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 개선 방안 마련·발표('17.3월) <input type="checkbox"/>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를 형식적인 회수와 보유에서 적극적인 조정과 정리로 전환 * 상각기준 정비 및 상각채권 일원화 관리, 부실채권 관리 모범사례 발굴·공유, 인센티브 구조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 <input type="checkbox"/>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각 기관별 내규개정을 완료하여, 주요 제도 개선 방안을 '17.3분기부터 시행 중 <b>&lt;향후 추진계획&gt;</b> <input type="checkbox"/> 연체발생 전·후 단계별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0. 지방자치단체나 채무자단체 등이 수행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재무설계 서비스를 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통합지원센터와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지원을 통해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에 대한 재무설계 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17.1월)</p> <p>○ 통합지원센터와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상담사례 공유 강화</p> <p>○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채무(설계)상담 전문기관과 통합지원센터 간 다이렉트 콜 연결을 통해 심층 채무(설계)상담 지원</p> <p><input type="checkbox"/>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와 MOU 추진 중 (연내)</p>
11.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결과를 제출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해당 의원실에 관련 자료 설명 완료</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스트레스 테스트 지속 추진</p>
12. 마이너스통장의 체크카드 연계 서비스를 금지할 것인지를 관련하여 금융위 방침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조속히 확정, 명확히 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소비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마통 연계 체크카드 이용을 당장에 일률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되,</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우선, 소비자가 충분히 장·단점을 고려하여 연계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설명·안내를 강화* (16.12월)</p> <p>* 상품 신청 단계에서 마이너스 결제시 이자가 즉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함</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향후, 이용 추이와 소비자의 편의성 및 부담 정도 등을 보아가며 제한 여부를 지속 검토</p>
13. 보증자리론 축소에 따른 주택 자금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디딤돌대출 등 저리의 정책모기지 공급대상을 서민·실수요자로 한정 하되, 공급규모를 확대(41→44조원) 하는 내용의 개편방안 발표(16.12월)</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정책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p>
14.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사 간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원만한 도입을 위해 합의체를 구성하여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보수체계 결정과 관련한 사항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참고로, 공운위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여부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17.6.16.)</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노사 자율적으로 기관별 보수체계 등을 합의하여 결정</p> <p>○ 정부는 필요시 갈등 조정 등 지원 역할 수행 계획</p>
15. 한미약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금의 환수 방안을 검토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시장질서교란행위 위반자 14인에게 총 24억의 과징금을 부과('17.5.24)</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시장 질서교란행위 혐의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 예정</p>
16. 자율공사·의무공사 사항 재분류 등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동 내용 등을 반영한 거래소 공시 규정 개정 완료('16.12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17. 공매도 관련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매도 공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공매도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마련('16.11월, '17.8월)</p> <p>①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자본시장법 개정안(정태욱 의원, '17.2.2.) 국회 계류중)</p> <p>②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17.3.27. 시행, '17.9.25 개선)</p> <p>-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1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를 제한</p> <p>③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p> <p>- 무차입공매도금지, 공매도 호가제한 규제 등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이 확인된 경우 일정기간 매도증권 100% 사전납부 의무화('17.3.27. 시행)</p> <p>-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하락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명확히 규정·처벌(자본시장법 개정안(정태욱 의원, '17.2.2.) 국회 계류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④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기한 단축 (17.3.22. 금투업규정 개정)</p> <p>- (현행) T+3일 → (개선) T+2일</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공매도 개선방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속 추진</p> <p><input type="checkbox"/>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기준 강화 추진</p>
18.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지정 제도 확대 및 외부감사인 선정 방식 보완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를 위한 외부 감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17.9.28)</p>
19.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시 재벌의 자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국회 입법 논의 시, 은산분리 완화의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그룹은 제외하고,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등의 거래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보완방안을 대안으로 마련·제시</p> <p>*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은행법상 대주주 거래 제한 등 규제를 한층 강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20.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16개 은행 및 25개 증권사가 참여하는 은행 및 금융투자 분야 블록체인 컨소시엄 출범(16.11~12월)</p> <p>○ '17년중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 서비스 개시를 추진중</p> <p>*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업권간 정보공유 및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블록체인 협의회 구성(16.11월)</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블록체인 협의회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따른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p>
21.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 중금리 대출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우체국의 중금리대출 취급을 위해서는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감독방안,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p> <p>*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既 발의(김영주 의원, '16.10.20)</p> <p>○ 동 의견을 김영주 의원실, 미방위 행정실 등에 설명(16.11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b>&lt;향후 추진계획&gt;</b> <input type="checkbox"/> 국회 미방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건전성 감독방안,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
22.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b>&lt;처리결과&gt;</b> <input type="checkbox"/> 모바일 앱 청구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등 청구서류 구비부담을 경감 *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16.12.20) ○ 향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청구 관련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논의 예정
23.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b>&lt;처리결과&gt;</b> <input type="checkbox"/>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8.9일)에서, '22년까지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해소할 계획임을 발표 ○ 한편,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대한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확산할 계획('17.9월,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2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는지 파악할 것	<b>&lt;처리결과&gt;</b> <input type="checkbox"/>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16.9.29) 이후 보험권 신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과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 * '16.10월 8,617,484건 → '17.6월 9,363,288건 / '15.10월 8,878,992건 → '16.6월 9,150,992건 <b>&lt;향후 추진계획&gt;</b> <input type="checkbox"/> 보험가입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25.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자기 손해사정제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검토할 것	<b>&lt;처리결과 &gt;</b> <input type="checkbox"/>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의 지급 규모를 정하는 것이 보험회사 고유의 업무인 점, 손해사정사 선임과정에서 소비자 불편, 손해사정 비용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자기손해사정제 폐지 여부는 업계·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b>&lt;향후 추진계획&gt;</b> <input type="checkbox"/> 손해사정사회,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손해사정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정한 손해사정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26. 공공건설공사 손해보험의 재보험 요율이 시장논리에 맞게 조정 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점검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재보험 규제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TF논의 진행중</p> <p>○ 건설공사보험을 포함한 일반 기업성 보험의 요율결정 체계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및 논의</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업권간 의견조정 등을 거쳐 건설 공사보험의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요율체계 마련</p>
2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의 가입대상 및 세제혜택이 제한적 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서민층 위주로 ISA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방안 마련('17.8.2, 2017 세법개정안)</p> <p>*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250만원 → 일반형 300만원, 서민형 500만원</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관련 법률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에 노력하고, 가입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 검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28.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주택 상속과정에서 배우자의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신탁제도 도입을 통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연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도입방안 발표('17.1월 업무계획)</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도입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추진</p>
29. P2P 대출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보완하는 등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투자금 분리 보관, 투자한도, 정보공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시행('17.2.27)</p>
30. 유사투자자문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감독 인력·예산 확충을 검토하고 영업 신고요건의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로부터 투자자보호를 위해</p> <p>○ '17.2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 방안」 마련·발표</p> <p>*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한 신고 결격사유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이 유료회원 으로 직접 가입하여 내부 암행점검 실시</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내용을 자본시장법 등에 반영 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투자자문업자 암행점검 등 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li> </ul>
31. 병·의원 및 약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	<p><b>&lt;처리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현행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업권 간 형평성 측면 등을 감안하여 신중 검토할 필요</li> <li>○ 관심 의원에 동 내용을 설명('17.1월)</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내용을 담은 여전법 개정안이 현재 정무위 소위 계류 중으로 국회·업권과 지속 논의하겠음</li> </ul>
32.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공공밴 도입, 리베이트 근절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정책 대안들을 검토할 것	<p><b>&lt;처리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하여 현재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코너 설치·운영 및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점검('15.11월 ~'16.10월, 8개사) 등 감독당국 차원에서의 대응노력 지속</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기타 공공밴 도입 및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업권과 협의하여 나갈 예정</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33.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IC 단말기 교체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p><b>&lt;처리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전환 완료를 위해 기존 3개사에서 참여의향이 있는 VAN사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확대(여신협회, '17.2월)</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단말기 전환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계의 사업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li> </ul>
34.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p><b>&lt;처리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판매점의 전자결제대행 수수료를 부과 현황을 파악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가맹점 수수료 요율체계, 산정기준 등의 적정성을 점검('16.12월)</li> </ul> </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결제대행업자의 규모 및 영업이익, 수수료 요율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35. 한국증권금융이 예탁받은 주식을 활용하여 임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국정감사 이후 한국증권금융이 예탁 주식에 대하여 임의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p> <p>○ 의결권 행사시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 지도·감독</p> <p>* 한국증권금융 내규 개정 완료('17.4월)</p>
36. 금융위원회가 유관기관들을 동원하여 금융개혁 홍보 및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해당 기관들로부터 과전인력을 과도하게 지원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국회 및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6년 4월 이후로는 협찬 및 비용분담을 하지 않고 있음</p> <p>* 감사원 통보('15.11월) 시점에 이미 금융개혁 홍보가 진행 중이어서 도중에 중단·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금융개혁 홍보를 계획대로 집행·종료하고 '16년 4월 이후에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엄격히 준수</p> <p><input type="checkbox"/> '16년부터는 주요 현안 마무리에 따른 부서별 필요성을 점검하여 민간전문가를 적정 수준으로 운영토록 지속 노력 중</p> <p>○ 특히, 작년 하반기 부서별 민간 전문가 운용현황을 전면 재점검하여 12월에 18명 감축</p> <p>* ('16.12월초) 79명 → ('16.12월말) 61명</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향후 금융정책 홍보사업 추진 시 민간, 금융협회 등에 홍보비용을 분담시키는 일은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근거가 될 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p> <p><input type="checkbox"/> 주요 현안 대응,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p>
37.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경우 이해 상충 소지 및 관(官)에 대한 로비 창구로의 활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 운영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민간근무휴직제도는 민간기업의 혁신 사례 및 경쟁력을 공직내 이식·확산하고,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존폐여부는 인사처에서 결정할 사항임</p> <p><input type="checkbox"/> 다만, 금융위는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 시 「공무원 임용규칙」 제10장 제4절의 관련 규정 및 인사혁신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준수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로비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업무추진 성과 및 근무실태점검, 보수 제한 및 수령내역 점검, 복직 후 보직검토 등</p>
38. 금융위원회 사무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기관 및 언론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여 보고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당사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16.10.21 개착)</p> <p>* 징계위를 통한 파면('17.2.20)</p> <p>○ 한편 수사기관 및 언론대응 등도 향후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히 행동하겠음</p>
39.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증권금융 임원이 모두 외부인사로 채워진 점 등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한국거래소 이사장 및 한국증권금융 임원은 관련 법률 및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후보추천위원회 및 주주총회 등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전문성·경력·도덕성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각 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할 예정</p> <p>○ 금융위가 임명 또는 제청하는 금융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운영법」 및 개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후보자들의</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토·논의하여 선임하고 있음</p>
40. 금융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금융공공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재취업 관련 방안 현황</p> <p>○ 산업은행은 '16. 6월 및 10월에 별도의 '혁신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산업은행 임직원의 출자회사 등에 대한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였음</p> <p>○ 한편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되는 금융공공기관 임원의 재취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상자와 해당 기관의 업무 관련성,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전문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고 있음</p> <p><b>&lt;향후 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공직자 윤리법」 등에 따른 취업심사 등을 통해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취업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p>
41. 저축은행 TV광고가 광고시간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광고 총량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광고시간대 규제('15.8월) 이후 광고비* 증가폭은 크게 감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규제 도입을 검토할 것	<p>* 저축은행 광고비 지출 : ('13) 359억원→('14) 806억원→('15) 1,179억원→('16) 1,194억원</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의 광고 동향, 대출 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광고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p>
42.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최고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지속 검토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4%로 인하 추진('18.1월 시행 예정)</p> <p>○ 최고금리 인하 관련 복수의 의원 입법안이 발의·계류 중으로, 입법 논의 과정을 통해 지속 논의</p>
43. 대부업체가 이익을 사내유보하기 위해 연체율에 비해 대손충당금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 주관으로 상위 5개* 대부업체 대손충당금 관련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음('17.4월)</p> <p>* 아프로대부,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p> <p>○ 5개업체는 매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수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p>
44.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대출	<b>&lt;처리결과&gt;</b>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신용평가 산정 관련 문제점을 개선할 것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시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발표('17.1월)</p> <p>○ 신용조회회사가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도록 함</p> <p>○ 제2금융권 대출 이용시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 하락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중·저신용자, 재기사업자 등의 여신 이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중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p>
45.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있어 타 업권과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현행 '요주의'로 분류되는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p> <p>○ 압류·가압류 설정금액이 소액(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인 경우 '정상' 분류를 허용</p> <p>-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완료('17.4.5. 시행)</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46.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금융서비스 접근권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b>&lt;처리결과&gt;</b>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금융이용계약 해소방안 발표(17.9.7) * 장애인금융이용 실태조사, 장애인 금융 이용 개선 관련 간담회 등 검토 결과 반영
47. 금융서비스 이용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을 평가하여 장애인 관련 금융정책에 반영할 것	
48.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b>&lt;처리 결과&gt;</b> <input type="checkbox"/> 예금보호한도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17.9.14) * 간담회 의견 : 현행 보호한도가 국제적 권고 수준에 부합하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대규모 자금이동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예금자 및 금융회사의 위험추구행위 증가(도덕적 해이), 업권간 경쟁 왜곡 등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보호한도의 상향 조정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  <b>&lt;향후 추진계획&gt;</b> <input type="checkbox"/> 예금보호한도 조정은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 ○ 경제규모 증가, 금융환경 변화 등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따른 한도 조정 필요성과 한도 조정에 따른 금융회사 및 예금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검토를 지속할 계획
49. 농협중앙회에 집중된 기능을 단위조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b>&lt;처리결과&gt;</b> <input type="checkbox"/>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 간 기능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사항임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는 단위조합의 신용사업 및 농협은행의 건전한 경영 도모 등을 위한 관리·감독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상호금융협의회' 등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음
50. 헤지펀드와 재벌의 유착관계(삼상엘리트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b>&lt;향후 추진계획&gt;</b> <input type="checkbox"/> 주요 대규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지분보유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51. 전자문서를 통해 주주에 대한 각종 통지가 가능하도록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b>&lt;처리결과&gt;</b>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항을 법무부에 통보하고, 법무부와 협의  ※ 법무부는 해당 사항은 자본시장법이 아닌 상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및 상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법무부가 상법 개정 추진시 내용 검토 등 입법 지원</p>
52. 동양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대기업계열별 금융그룹 모니터링 체계 마련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신속히 이행할 것	<p><b>&lt;추진경과&gt;</b></p> <p><input type="checkbox"/>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감독대상 및 감독내용 등을 지속 검토해 왔으며,</p> <p>○ 세미나·공청회 등을 통해 감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음</p> <p>* 금융그룹감독 개선방안 세미나('15.11월), 업계간담회 개최('16.6월, '17.2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17.9월)</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국제기준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통합 감독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토를 통해</p> <p>○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통합감독 취지에 부합하는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53.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새로 도입된 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증권회사에 과도한 유휴자본 보유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장외파생 상품에도 신 NCR 제도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7.3월) 및 공포·시행('17.4월)</p> <p>○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기준을 신 NCR로 변경*</p> <p>* (기존 舊NCR 200% → (변경) 新NCR 150%)</p>
54. 불법 주식장외거래 방지대책으로서 K-OTC(한국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불법 주식장외거래 유인을 제도화된 K-OTC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K-OTC 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 중</p> <p>* K-OTC 거래시 증권거래세를 거래소 장내 시장 수준으로 인하(0.5% → 0.3%), 「전문가 전용 거래플랫폼」 신설 검토 등</p>
55.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재단 관련 법령, 정관 등에 의거한 모니터링을 통한 재단 목적성 부합 노력을 지속</p> <p>○ 재단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재단의무사항 이행 여부 (국세청, 관할세무서, 출연기관 등)에 대한 점검 철저</p> <p>○ 예산안 등의 사전 보고를 통한 적정성</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검증 및 예산 범위내 적정 투자 유도</p> <p>○ 투자심사위원회(전원 외부전문가) 및 투자 집행위원회(외부 3인+내부 2인)를 통한 투자투명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성장사다리펀드 전문위원회에 재단 상임이사를 참여시켜 공정한 투자 절차 준수를 지속 모니터링</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재단 설립취지에 맞는 엄격한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p>
56.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 강화 및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17.9.28)</p> <p><input type="checkbox"/>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강화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7.3월 정무위 의결</p> <p>* 사회적 책임 관련사항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보고서에 기재 가능</p>
57. 삼성물산 합병 및 한미약품 공시 지연 등 불공정거래 의혹 제기 사안에 대해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권한을 활용하여 조사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자(2차·3차·3차 이후 다차수령자)를 조사하여</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장질서교란 행위 위반자 14인에게 총 24억의 과징금 부과('17.5.24)</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시장 질서교란행위 혐의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 예정</p>
58. 실효성 있는 파생상품시장 육성 대책을 마련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16.11월)</p> <p>① 파생상품 상장절차 간소화('17.3월)</p> <p>②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승수 인하('17.3월)</p> <p>* 코스피200 선물·옵션 : 50만 → 25만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 10만 → 5만</p> <p>③ 기본예탁금 인하* 및 투자자 교육 시간 합리화('17.3월)</p> <p>* 옵션매수 : 5천만원 → 3천만원 기존 일괄 30시간 → 1단계 20시간, 2단계 10시간으로 구분</p> <p>④ 신규 파생상품 상장('17.6월)</p> <p>* ETF 선물(3종목), 개별주식선물(9종목) · 옵션(10종목) 추가 상장</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⑤ 해지전용계좌 및 외국인 옴니버스 계좌 도입('17.6월)</p> <p><b>&lt;향후 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시장 접근성 제고 및 신상품 공급 확대 등 파생시장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p>
59. 증권시장에서 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b>&l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증권시장의 투자자 확충을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및 자본이득세 도입 방안에 대해 세제당국과 지속 협의</p>
60. 어음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매출채권담보대출 도입 등 적극적인 대안 검토 필요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관계부처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 방안에 대해 논의 중</p> <p>* 중기부, 법무부, 공정위, 금융위 등으로 구성, '17.8.10 Kick Off 회의 개최</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17년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p>
61. 금융감독원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안전 범위에 규정 제·개정 관련 안전을 포함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장의 안전 상정 요청권을 확대 하는 내용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이</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발의(박용진의원, '16.10.31)되어 국회 논의중</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국회 논의 과정에서 同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계획</p>
62. “월세입자 투자폴”의 계약 기간이 4년이어서 임대차 계약 주기 2년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가입자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계약기간이 4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2년마다 전세를 재계약하는 서민의 경우 여유자금 없이 펀드를 해약하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만큼, 월세입자 투자폴을 추진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p> <p>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패널티 없이 환매 허용</p> <p>② 긴급자금 수요 발생 시 투자폴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서민·중산층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되므로, 사업성·수익성을 갖춘 뉴스테이 사업지가 확보되고, 짧은 기간내 대규모 투자폴이 조성될 수 있으며, 금리상승 등 변동에 따른 운용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경우 同 사업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계획
63. 청년희망펀드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권 실적 쟁기, 대기업 준조세 등의 문제점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	<b>&lt;향후 추진계획&gt;</b> <input type="checkbox"/> 청년희망펀드 조성은 국조실, 법무부 등이 추진한 과제임
64.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부산이전 금융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가족의 현지이주가 부진한 문제와 지역인재채용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b>&lt;처리결과&gt;</b> <input type="checkbox"/> 부산이전 금융공공기관은 임직원 현지이주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 중 ※ 주요기관 임직원 현지 이주현황 - (주금공) 배우자 직장교류를 반영한 정기인사 등으로 가족동반 이주율 상승 * ('15년말) 32.2% → ('17.6월말) 37.6% - (기보) 본점 소속 임직원 중 부산경남 거주율은 약 절반 수준 ※ 주요기관 지역인재채용 현황 - (주금공) 자체 채용설명회 개최 등 채용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중 확대 * ('16년) 17.3% → ('17.9월말) 26.4% - (예탁원) 지역인재 신규채용 목표 (20%) 초과달성('16년·'17년 상반기) <b>&lt;향후 추진계획&gt;</b> <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부산지역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지역 소재 정책금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 ○ 또한 지역인재 채용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원 계획 * '17년 국비 예산 10억원
65. 금융공공기관이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자가운전보조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고용을 위한 예산 배정에 노력할 것	<b>&lt;처리결과&gt;</b>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의무고용률」을 경영평가지표(정부권장정책)에 반영하여 평가 중(산·기보 등 준정부기관은 기재부에서, 산은·기은은 금융위에서 평가) *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시간선택제 일자리실적, 장애인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구매, 온실 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실적, 재정 조기집행 이행실적 <input type="checkbox"/> 한편, 자가운전보조비* 등 복리후생비는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포함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 * 산은, 기은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인상을 제한, 알리오 공시 등 <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국책은행 등 예산편성시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음
66.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과 파업 관련 상황점검 회의를 갖고,	<b>&lt;향후 추진계획&gt;</b>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파업불참 독려와 근태관리 당부를 하는 것은 합법적 파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이므로 이를 지양할 것	<input type="checkbox"/> 파업 등 노사 관계 관련 이슈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금융회사 노동자 파업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 시장 혼란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상황점검 및 대응 필요
67. 금융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퇴직 전 호적을 변경해 정년을 연장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독을 철저히 할 것	<b>&lt;처리결과&gt;</b> <input type="checkbox"/> 금융공공기관은 입사 당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면직 연령을 산정토록 조치 * 산은('13.7월)·기은('14.4월)·캠코('15.9월)는 내규 개정완료, 예보는 기준안 마련후 내규 개정중
68. 대우조선해양의 자구계획 이행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향후 이행 여부를 엄정히 평가하고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b>&lt;처리결과&gt;</b> <input type="checkbox"/> 자구계획 이행 및 경영정상화 추진 상황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를 운영중 ('17.5.8일 출범) * 이전에는 산은, 수은,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
69. 금융위 주도로 설립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하자과 설립 이후 정부기관의 지속적 개입에	<b>&lt;처리결과&gt;</b> <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국회 지적 사항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바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관해 진상을 규명할 것	<input type="checkbox"/> 청년창업재단은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은행권 주도로 자율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금융위 개입이 없었음 <input type="checkbox"/> 국회에서 지적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 창업재단 창립총회 및 창립이사회 의결은 이사진(은행장 및 공공기관장)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서면결의 되었으며, 동 서면결의는 사전에 안전을 송부하고 의결서에 직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창립총회 의사록, 의결서, 출연확약서 상 기명날인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각 기관의 부서별로 다른 사용인감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동 사용 인감들도 법적으로 동일한 “정식 사용인감”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국회에서 지적한 정부기관의 개입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 2013년 창업재단은 신기술, 지식 재산, 문화콘텐츠 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해 공식적으로 각각 여전협회, 문화부, 지경부로부터 운용사 추천을 받았으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사 선정은 창업재단 내부 규정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음</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 설립취지에 맞는 엄격한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li> </ul>
70. 서민금융진흥원이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p><b>&lt;처리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1.5일)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방안(1.16일)에 따라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li> <li>○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완화(17.4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소금융 7등급 → 6등급 이하, 햇살론·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소득기준 500만원 상향</li> </ul> </li> <li>○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확대(17.4~6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자금(2천만원), 생계자금(800만원)→1,200만원) 지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 인센티브 제공</li> </ul> </li> <li>- 한부모가정, 새터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자금(1,200만원), 주거자금(2천만원),</li> </ul> </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교육비(5백만원), 자산형성(청소년한부모), 실손보험(조손가정 조부모)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지원확대</li> <li>* 긴급생계자금 한도확대(500만원 → 1,000만원)</li> </ul>
71. 대우조선해양의 자본잠식과 상장폐지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것	<p><b>&lt;처리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10월, 회사 파산시 조선업 및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한도대출 4.2조원 등 산은·수은 주도의 정상화 추진</li> <li>○ '17.3월, 부실우려가 다시 제기, '17.4월에 이해관계자(노사·채권은행·사채권자)의 손실분담 합의 완료 후 산은·수은의 한도대출 2.9조원 등 정상화 지원중</li> <li>□ 추가 정상화 방안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자본잠식 우려가 해소됨</li> <li>○ '17.6월 채권은행이 2.1조원 출자전환 실행하여 부채비율이 244%로 개선,</li> <li>○ '17.8월 회사채·CP 0.8조원 출자전환 실행하여 추가 재무구조 개선 기대</li> </ul>
72. 우리은행이 시중은행으로서 시장논리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한 잔여지분을 조속히 매각하기 위해	<p><b>&lt;처리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12월 과점주주 매각방식으로 지분 29.7%를 매각하여 민영화 성공(예보 지분율 51.1%→21.4%)</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각 이후 예금보험공사-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공자위 의결('16.12.16.)을 거쳐 해제하였음</li> <li>□ '14년 소수지분 매각시 부여된 콜 옵션 행사로 2.85% 지분 매각</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여지분도 공자위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임</li> </ul> <p>※ 현재 예보가 보유중인 우리은행 잔여지분은 18.4%(콜옵션 제외)</p>
73. 클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p><b>&lt;처리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광고규제 완화, 투자한도 확대 등을 포함한 「클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발표('16.11.7.)</li> <li>□ 광고규제 완화 및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17.9.28 국회 통과)</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한도 확대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li> </ul>
74. 금융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전심사방식인 현행 약관	<p><b>&lt;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약관의 사전심사 제도를</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정 약관심사기한을 준수할 것	<p>사후심사 방식으로 운영토록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계류 중</p> <p>*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법 (김종석의원 대표 발의, '16.10.31)</p>
75.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한 이중규제(한국증권금융에의 의무예치, 예금보험료 납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b>&lt;처리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예치제도와 예금보험제도는 목적 및 보호방식 등이 상이하여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음</li> <li>○ 다만, 별도예치에 따른 상대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자자예탁금 중 한국증권금융 별도예치분에 대해서는 예보료 30% 할인 적용 중</li> <li>□ 美, 英, 日 등 선진국에서도 별도 예치제도와 예금보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음</li> </ul>
76. 한국거래소의 직장내 성희롱· 집단따돌림 피해 여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 검찰수사 협조 등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p><b>&lt;처리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거래소의 징계,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완료</li> <li>① 거래소 내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징계, 인사조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정직, 보직해임, 대기발령, 견책, 전보조치</li> <li>- 감독자 대상으로 견책, 주의, 전보 조치</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② 관련제도 정비 및 교육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직원 고충처리 위원회’ 신설(‘16.12월)</li> <li>- 성희롱 징계시효 강화(2년→5년)</li> <li>- 예방교육, 책자배포 및 온라인 강좌 의무 수강(‘16.12월)</li> </ul> <p>③ 폭력,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 및 근로자 고충해소 지원프로그램 시행(‘17.4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위자 대상 인사상 불이익 강화</li> <li>-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징계</li> <li>- 2진아웃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차 물의 유발 직원은 가중징계, 영구 보임해제 및 승진대상에서 영구 제외</li> </ul> </li> <li>- 부서장 책임제 시행(관리책임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半期중 최소 1회 계도의무 부과</li> </ul> </li> <li>- 고충처리인프라 정비</li> <li>· ‘성희롱 등 고충 예방 및 처리지침’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신고조사→조치 프로세스 명확화</li> </ul> </li> <li>· 다양한 형태의 고충상담 채널 구축</li> <li>- 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강화</li> <li>· 신규보임자 대상 별도교육 실시 등</li> <li>- 전 직원 대상 심리치료 및 상담 등</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p>지원프로그램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내망(인트라넷) 內 사이버 고충상담 센터 개설 예정(‘17. 10월 예정)</li> </ul>
77. 국민연금에 한미약품이 공매도 후 상환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국민연금 주식 대여시기, 상환시기를 파악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	<p><b>&lt;처리결과&gt;</b></p> <p>□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한미약품 관련 중요정보가 공개된 시점, 당해 정보공개 전후 매매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였고</p> <p>○ 그 결과 국민연금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p>

#### IV.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감사원은 '16년 실시한 『금융규제개혁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17년에 통보하였음
- 또한, 감사원은 '17년 금융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재무감사('17.03.06~03.17, 총 10일)』를 실시하였음

##### < 금융규제개혁 추진실태 ('16.11.14~12.9) >

지적사항	조치결과
<p>□ 명시적 규제개선 과제 선정 및 이행관리 미흡 (통보,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2015년 정비대상 규제의 목록과 규제개선 이행실적이 체계적으로 점검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이행관리 업무주체를 명확히 하고,</li> <li>○ 점검결과 공개방법 등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할 것</li> </ul>	완료
<p>□ 중장기검토 과제 등 이행관리 미흡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 제안과제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거나 개선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중장기검토 과제 및 타부처 검토요청 과제도 주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공개하는 등 이행관리방안을 마련할 것</li> </ul>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p>□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이행관리 미흡 (통보)</p> <p>○ ‘감독행정 내부통제 강화’ 등 그림자규제 개선 과제가 당초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등에 발송한 공문을 매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완료
<p>□ 금융개혁 관련 설문조사 용역결과 검수 등 부적정 (주의)</p> <p>○ 앞으로 잘못 작성된 연구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고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연구용역이 적합하게 수행된 것으로 검수 완료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자료 등으로 발표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p>	완료
<p>□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 통제 미흡 (통보)</p> <p>○ 법적 근거 없이 규정·운용되고 있는 51개 행정 규제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고,</p> <p>○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4개의 금융협회 소관 8개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하고,</p> <p>○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를 조속히 등록·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p>□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권한 위탁 부적정 (통보)</p> <p>○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법령상 위탁 근거를 마련하거나 해당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완료
<p>□ 제재양정기준 규정화 및 공개 미흡 (통보)</p> <p>○ 내부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립성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과 “과태료 부과 실무기준”을 해당 금융업권별 감독규정(고시)이나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에 규정화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조치중
<p>□ 행정지도를 통한 규제 부적정 (통보)</p> <p>○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실태회사의 토지실태 취급제한 행정지도”, “ARS 발행대상 제한 및 지수산출 절차와 관련한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법규화 여부를 결정하고,</p> <p>○ 금융위원회가 스스로 새로운 행정지도를 하거나 기존 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 또는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법규화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p>	조치중

지적사항	조치결과
<p><input type="checkbox"/> 행정지도 자체검증 절차 및 판단 기준 미흡 (통보)</p> <p>○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공문 발송 시 해당 공문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지도 시 거쳐야 할 절차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자체검증 절차와 판단 기준을 마련할 것</p>	완료

<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17.03.06~03.17) >

지적사항	조치결과
<p><input type="checkbox"/> 소송비용 회수업무처리 부적정 (통보)</p> <p>○ 국가승소 확정사건 14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방안 마련할 것</p>	조치중
<p><input type="checkbox"/> 2016회계년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 (통보)</p> <p>○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근거를 작성하지 않거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과소하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p> <p>○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지표 실적 측정 방법과 다르게 실적을 측정·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p>	완료

□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7년도 9월말 현재기준 「보험연구원」('16.10.24 ~ 10.31)와 「금융연수원」('17.02.13~02.21), 「은행연합회」('17.04.17~04.27), 「신용정보협회」('17.06.26~06.30)에 대한 종합감사 등 총 4건의 산하기관 감사를 실시
- 이후 하반기 중 1~2곳의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

< 보험연구원 종합감사 ('16.10.24~10.31) >

지적사항	조치결과
<p>□ 직원 국외연수 내실화 필요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연구원 업무와 연계되어 직원의 역량 강화에 적합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의 설계·발굴 등 국외연수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li> </ul>	완료
<p>□ 직원 정년퇴직 차등에 대한 조정 필요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정년차등 및 의무화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에 맞게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필요</li> </ul>	조치중
<p>□ 복리후생비 등 일부 경비항목의 계정분류 오류 (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료 등 일부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분류 오류를 시정하여 시행할 것</li> </ul>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p>□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미기재 (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가 투명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주석을 철저히 기재토록 시정할 것</li> </ul>	완료
<p>□ 경조사비 집행기준 및 통제장치 필요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조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li> </ul>	완료
<p>□ 학회 및 연구단체 찬조금 집행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명확한 지원기준이나 목적없이 학회 등에 임의로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동 사업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li> </ul>	완료
<p>□ 국외출장여비 중 준비금 용도 불분명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준비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li> </ul>	완료
<p>□ 연구사업관리 철저 및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 필요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사업이 폐기, 지연 및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구결과물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li> </ul>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p><input type="checkbox"/> 연구자문위원회 자문결과에 대한 사후 피드백 미흡 (개선)</p> <p>○ 향후 자문결과가 반영된 연구사업에 대하여는 사후 피드백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자문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p>	완료
<p><input type="checkbox"/> 연차휴가보상금 과다지급 등 관리 부적정 (개선)</p> <p>○ 향후 연차휴가의 최대부여일수 조정, 최대보상일수 제한 및 의무사용 활성화 등 유급휴가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p>	조치중
<p><input type="checkbox"/> 자녀 학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필요 (권고)</p> <p>○ 특목·사립고 및 특수계열 대학교 재학 직원 자녀의 학비 지원에 대해 직원간 및 유관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p>	조치중
<p><input type="checkbox"/> 회사차량 운용관리 미흡 (개선)</p> <p>○ 회사 차량 운행·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지침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p>	완료

< 금융연수원 종합감사 ('17.02.13~02.21) >

지적사항	조치결과
<p><input type="checkbox"/>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 제고 필요 (통보)</p> <p>○ 향후, 연수원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의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의 적정한 구성 필요</p>	완료
<p><input type="checkbox"/> 연수원 포상제도 개선 필요 (권고)</p> <p>○ 향후 내부포상 규모조정, 대내외 포상시기 통합 및 현행 우수강사 포상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화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포상제도를 운영할 필요</p>	완료
<p><input type="checkbox"/> 전문자문교수 자문결과에 대한 사후 피드백 미흡 (통보)</p> <p>○ 전문자문교수 자문결과가 반영된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 마련 등 전문자문교수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p>	완료
<p><input type="checkbox"/> 퇴직급여, 연차수당미지급관련 회계규정 미비 사항 (개선)</p> <p>○ 퇴직급여 및 연차유급휴가미지급비용의 회계처리를 회계규정에 부합하도록 조치</p>	완료
<p><input type="checkbox"/> 일부 재무상태표 항목의 계정분류 오류 (시정)</p> <p>○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장기대여금의 재무제표 계정분류 오류를 시정할 필요</p>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p>□ <b>섭외성 경비 집행기준 수립 필요 (통보)</b></p> <p>○ 섭외성경비의 내부통제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사례 등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p>	완료
<p>□ <b>국외출장여비 중 준비금 용도 불분명 (개선)</b></p> <p>○ 향후 용도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준비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p>	완료
<p>□ <b>회사차량 운용관리 미흡 (개선)</b></p> <p>○ 회사 차량 운행·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p>	완료
<p>□ <b>강사 선정 등에 대한 절차 미준수 및 강사 평가 객관성 미흡 (권고)</b></p> <p>○ 강사선정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왜곡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사평가관련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p>	완료
<p>□ <b>자격검정시험 출제자, 채점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지침 미준수 (개선)</b></p> <p>○ 자격검정시험 출제자, 채점자 등의 선정·변경 등의 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준수할 필요</p>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p>□ <b>연수용 교재 등 과다제작 및 재고 관리 부적정 (권고)</b></p> <p>○ 연수용 교재의 수요예측을 신중히 하고, 남은 교재의 재활용 방안을 사전 모색하는 등 도서 폐기에 따른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p>	완료
<p>□ <b>연차휴가제도 운영 및 관리 미흡 (개선)</b></p> <p>○ 향후 연차보상금 지급일수 제한 및 연차휴가 활성화 실시 등 연차휴가제도 운영방안을 개선할 필요</p>	완료
<p>□ <b>인병휴직의 불합리한 기간 산정 개선 필요 (통보)</b></p> <p>○ 인병휴직 기간산정에서 불합리한 차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p>	완료
<p>□ <b>콘도회원권 운영 및 관리 미흡 (통보)</b></p> <p>○ 사용실적 및 이용예상율을 토대로 적정수준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토록 개선할 필요</p>	완료
<p>□ <b>차량유지비 관리 부적정 (개선)</b></p> <p>○ 향후 차량유지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p>	완료

< 은행연합회 종합감사 ('17.04.17~04.27) >

지적사항	조치결과
<p><b>□ 직원채용 전형 개선 필요 (개선)</b></p> <p>○ 향후, 채용전형 심사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제척사유 검토 등 채용절차 보완 필요</p>	완료
<p><b>□ 직원 외부 파견제도 운영 부적정 (개선)</b></p> <p>○ 파견절차 및 파견기간 등을 관련규정에 반영조치하고, 향후 현행 무기한 파견근무 운영은 관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p>	완료
<p><b>□ 회원은행의 연합회 경영정보 접근성 제고 필요 (통보)</b></p> <p>○ 연합회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원은행들의 연합회 경영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p>	완료
<p><b>□ 은행연합회의 내부규정 정비 필요 (통보)</b></p> <p>○ 환경변화나 현실에 맞도록 연합회 규정의 용어정비, 통폐합 등 내부규정을 정비할 필요</p>	완료
<p><b>□ 회원은행 만족도 조사 미흡 및 사후관리 철저 필요 (통보)</b></p> <p>○ 설문조사 참여도 제고 및 회원은행 만족도 제고방안의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시행</p>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p><b>□ 전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필요 (통보)</b></p> <p>○ 전문위원회의 안건 발굴 및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전문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재검토하여 중복되거나 존립 필요성이 없는 전문위원회는 병합·폐지</p>	완료
<p><b>□ 전산실 관리·보호대책 강화 필요 (개선)</b></p> <p>○ 연합회는 주 전산실 관리·보호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시행</p>	완료
<p><b>□ 재해복구 비상계획 실효성 확보 필요 (개선)</b></p> <p>○ 재해복구 비상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현실에 맞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p>	완료
<p><b>□ IT업무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필요 (통보)</b></p> <p>○ IT업무자문위원회의 운영 필요성을 검토하고,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자문위원 위촉관련 합리적 기준 및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시행</p>	완료
<p><b>□ 회사차량 운행관리 미흡 (개선)</b></p> <p>○ 회사차량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차량관리 기준 마련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관리 철저</p>	완료
<p><b>□ 사내복지기금 재무제표 작성 부적정 (시정)</b></p> <p>○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임직원대여금 계정 분류 오류를 시정할 것</p>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p><b>□ 통합재무제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권고)</b></p> <p>○ 향후 재무보고 및 통합성과 측정 등에 통합재무제표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시행</p> <p><b>□ 자가운전보조비 관리 부적정 (개선)</b></p> <p>○ 자가운전보조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할 것</p>	<p>완료</p> <p>완료</p>

< 신용정보협회 종합감사 ('17.06.26~06.30) >

지적사항	조치결과
<p><b>□ 정·현원 관리 부적정 (개선)</b></p> <p>○ 향후, 정·현원관리는 채용,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의 기준이 됨을 감안, 적정한 정·현원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p>	조치중
<p><b>□ 직원 채용 공모방식 미흡 (통보)</b></p> <p>○ 채용전형시 공모방법 및 평가방법을 보다 다양하게 운영하여 다수의 취업준비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p>	조치중
<p><b>□ 회원사들이 협회 경영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통보)</b></p> <p>○ 대외공시 확대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회원사들이 협회 경영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p>	조치중
<p><b>□ 고문제도 운영 개선 필요 (권고)</b></p> <p>○ 전임 회장의 업무경험과 식견을 충분히 활용하여 협회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실적을 관리하는 등 고문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p>	조치중
<p><b>□ 회계, 출납 등 업무직원 신원보증보험 가입 필요 (권고)</b></p> <p>○ 회사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끼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계, 출납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실시할 필요</p>	조치중

지적사항	조치결과
<p><input type="checkbox"/> 회계처리 원칙 정비 필요 (권고)</p> <p>○ 협회의 재무정보를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처리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근 제정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참고하여 회계처리 원칙을 정비할 필요</p>	조치중
<p><input type="checkbox"/> 회계계정 분류 부적정 (시정)</p> <p>○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계정분류 오류를 시정할 것</p>	조치중
<p><input type="checkbox"/>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말소신고 등의 신청서류 관리 미흡 (통보)</p> <p>○ 보관기간이 경과한 신청서류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p>	조치중
<p><input type="checkbox"/> 가이드라인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법추심정보 지연등록 (개선)</p> <p>○ ‘가이드라인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정보등록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조치중

## V.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현황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은 1개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인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은 7개

### 가. 공공기관이 아닌 산하기관

- ① (금융감독원)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검사·감독
- ②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및 재가·자립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총괄
- ③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경제적 회생 지원

### 나. 공공기관인 산하기관

- ① 「공기업」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없음
- ②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4개
  -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제도 운용, 금융회사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전세자금 대출보증, 주택연금보증 등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 촉진
  - (신용보증기금) 담보력 부족기업·기술 기업 등의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지원

- ③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3개

- (한국산업은행) 성장동력산업 확충, 시장안전판 역할 수행 등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자금공급 전문역할 수행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매매 거래에 따른 결제 및 유통의 원활화를 달성

[참고] 공공기관 지정요건

분류		지정요건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공기업	자체수입 50% 이상 직원 50인 이상	0	-
	준정부기관	자체수입 50% 미만 직원 50인 이상	4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 타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3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기 타 산하공공기관		-	3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 「공공기관」은 설립근거, 재정지원(출자·출연·보조), 권한·기능위탁 등의 여부에 따라 지정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VI. 기타 사항

### I. 일반 현황

#### 1 설립경위 및 목적

- ☐ (설립경위) '08.2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 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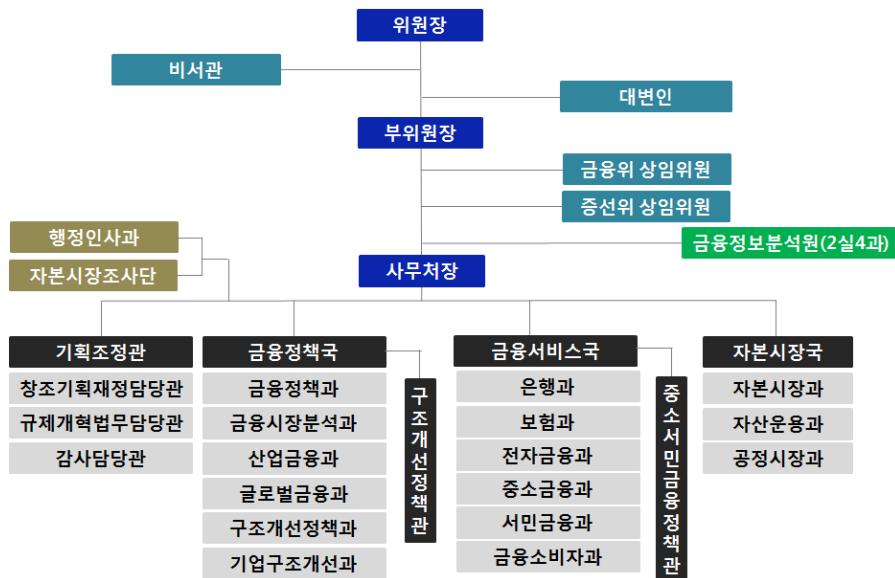
#### 2 주요 업무

- ☐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 마련
-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검사·제재
-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 양수·도 등의 인·허가
- ☐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피해구제
-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 등

#### 3 조 직

-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및 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2정책관 20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4 인원 및 예산

- 정원 : 267명 / 현원 : 282명 ('17.9.29일 현재)
- 예산('17년) : 일반회계 세입 778억원, 세출 2조 334억원

#### 참고

#### 2018년도 예산(안) 개요

#####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01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92억원 감소(△63.3%)

(단위 : 백만원)

구 분(항)	'17예산(A)	'18예산(B)	증감액(B-A)	증감률(%)
합 계	77,829	28,585	△49,244	△63.3
과 태 료	6,405	6,762	357	5.6
과 징 금	20,845	21,261	416	2.0
가 산 금	127	110	△17	△13.4
기타경상이전수입	50,452	452	△50,000	△99.1

#####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조 2,8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33억 원 증가(12.5%)
  - 2018년 금융위원회 운영 예산(안)은 1,8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7억 원 감소(△20.0%)
  -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금 예산(안)은 2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천억 원 증가(16.7%)

(단위 : 백만원)

구 분	'17예산(A)	'18예산(B)	증감액(B-A)	증감률(%)
합 계	2,033,414	2,286,762	253,348	12.5
□ 금융위원회 운영	233,414	186,762	△46,652	△20.0
○ 인 건 비	23,330	23,744	414	1.8
○ 기 본 경 비	7,436	7,058	△378	△5.1
○ 사 업 비	202,648	155,960	△46,688	△23.0
□ 내부 거래	1,800,000	2,100,000	300,000	16.7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1,800,000	2,100,000	300,000	16.7



## II.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산업 현황

### 1 금융시장 동향

#### 가. 국제 금융시장

◇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은 견고한 글로벌 경제성장세 등에 힘입어 호조세

- (주식) 글로벌 증시는 선진국·신흥국의 경제 회복세 속에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

주가등락률(%)	MSCI 선진국	MSCI 신흥국	미국	독일	영국	스페인	일본	인니	홍콩H	한국
'17년중	+15.6	+29.6	+15.7	+13.0	+5.5	+9.9	+9.2	+11.1	+21.5	+21.3
9월중	+2.1	△0.5	+2.1	+6.4	△0.8	+0.8	+3.6	+0.6	△3.4	+1.3
10.1~11일	+1.2	+3.2	+2.1	+1.1	+2.2	△2.0	+2.6	△0.3	+4.6	+2.7

※ 美 3대 지수는 모두 사상최고치를 경신(10.11일)

- (채권) 미국 국채금리는 美 연준의 10월 보유자산 축소 개시,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9월 이후 상승세

\* 12월 美 금리인상확률(%) : (9.29일)70.0 → (10.6일)78.5

- 유로지역 국채금리도 ECB의 테이퍼링 기대 속에 상승세

금리변동(bp,10y)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스페인	인도	말련	인니	멕시코	한국
'17년중	△10	+26	+14	+2	+26	+23	△32	△138	△29	+34
9월중	+22	+10	+13	+6	+4	+20	+3	+2	+2	+12
10.1~11일	+1	△0	+1	△0	+5	+8	△2	+10	+27	+4

- (환율) 금년들어 약세를 지속하던 달러화는 세제개편 기대감\*, 美 경제지표 호조 속에 9월 이후 소폭 강세 전환

\* 10.5일 예산결의안의 美 하원 통과 등으로 세제개편 통화에 대한 기대감 확대

통화절상률(%)	달러 인덱스	유로	파운드	엔	인도	말련	인니	멕시코	원화
'17년중	△9.0	+12.7	+7.1	+4.0	+4.3	+6.3	△0.2	+10.8	+6.4
9월중	+0.4	△0.8	+3.6	△2.3	△2.0	+1.2	△1.2	△2.1	△1.8
10.1~11일	△0.1	+0.4	△1.3	+0.0	+0.3	△0.0	△0.4	△2.4	+0.9

\* '+' 통화절상, '△' 통화절하

#### 나. 국내 금융시장

◇ 7월말 이후 北-美 간 긴장감 고조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국내 금융시장은 추석 연휴 이후 안정을 되찾는 모습

- (주식) 7월말 이후 북한 리스크 고조 등으로 하락하였던 주가는 연휴 직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10.11일, 2,458pt)하는 등 회복세

(단위:pt)	16년말	8월말	9월말	10.11일	9월말 비	8월말 비	16년말 비
KOSPI	2,026	2,363	2,394	2,458	+2.7%	+4.0%	+21.3%
KOSDAQ	631	658	653	662	+1.5%	+0.7%	+4.9%

- (환율) 원/달러 환율은 북한 리스크 고조, 달러화 강세 속에 1,150원(9.28일)까지 상승한 후 최근 1,135원 수준까지 하락

(단위:원)	16년말	8월말	9월말	10.11일	9월말 비	8월말 비	16년말 비
원/달러	1,207.7	1,127.8	1,145.4	1,135.2	△0.9%	+0.7%	△6.0%
원/100엔	1,036.3	1,025.5	1,017.9	1,009.2	△0.9%	△1.6%	△2.6%

- (채권) 국내 국채금리(10년물)는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 북한 리스크 고조 속에 상승세를 지속

(단위:%, bp)	16년말	8월말	9월말	10.11일	9월말 비	8월말 비	16년말 비
국고3년	1.64	1.75	1.89	1.93	+4.1bp	+18.2bp	+29.1bp
국고10년	2.07	2.26	2.38	2.42	+3.9bp	+15.6bp	+34.4bp

- 5년물과 10년물의 韓-美 내외 국채금리차 역전이 해소(10년물 8.7일 이후 해소)

\* 韓국채금리 - 美국채금리 차이(bp) : [16년말] (1y)+76 (3y)+19 (5y)△13 (10y)△37 [17.10.11일] (1y)+13 (3y)+25 (5y)+13 (10y)+2

- (외국인자금) 외국인 자금은 8월 들어 주식·채권 모두 순유출

(조원)	'16년	'17년	8월	9월	10.1~10월	보유잔액
주식	12.1	8.8	△4.6	△1.1	+0.8	626.1
채권	△12.3	9.8	△2.4	△3.7	△1.6	98.9
합계	△0.2	18.6	△2.2	△4.8	△0.8	724.9

- (CDS프리미엄) 북한 리스크 고조 속에 75.8bp(9.28일)까지 상승한 후 최근에는 70bp 수준에서 등락

	16년말	8월말	9월말	10.11일	9월말 비	8월말 비	16년말 비
CDS(5y, bp)	44.3	60.1	74.5	70.1	△4.4bp	+10.0bp	+25.9bp

## 2 금융산업 현황

### 개 황

- 2017년 6월 현재 **1,391개\*** 금융기관이 영업중이며,  
총자산은 **4,558조원** 수준

\* 금융위원회 감독대상 기준이며, 상호금융·새마을금고·대부업체 등은 미포함  
(’17.6월말 기준, 단위 : 개, 명, 조원)

구 분	업체수	점포수 <sup>1)</sup>	종사자수 <sup>2)</sup>	자기자본	총자산
은 행	17	7,182	111,160	194.6	2,706.5
일 반	12	5,120	78,746	115.2	1,738.0
특 수	5	2,062	32,414	79.4	968.5
중 권	53	1,196	35,561	50.9	400.3
선 물	5	2	391	0.4	3.4
자산운용	185	250	6,819	5.2	6.5
보 험	57	6,680	58,492	107.0	1,077.5
생 명	25	3,687	25,993	72.1	813.2
손 해	32	2,993	32,499	34.9	264.3
종합금융	1	5	83	0.2	1.6
저축은행	79	321	9,051	6.2	55.0
신용협동조합 <sup>3)</sup>	901	1,652	17,342	6.9	78.5
여신전문	93	796	19,569	44.8	230.7
신용카드	8	301	10,925	25.7	105.9
합 계	1,391	18,084	257,799	415.9	4,557.7

1) 해외지점, 해외현지법인, 해외사무소 포함

2) 해외직원 포함, 직원의 인력 제외

3) 조합수 기준

### 은 행

-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 건전성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7.6월 현재 **BIS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최저기준 8%)은 **15.37%**로 해외 우수은행과 비교하여서도 양호한 수준
  - \* 국내은행은 ’13.12월부터 바젤 III를 적용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대의 우량한 자본비율 수준을 유지

#### < 국내은행 자본적정성 추이(%) >

구 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6월
BIS 비율	14.55	13.96	14.30	14.53	14.00	13.91	14.81	15.37

-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은 **1.25%**로 부실채권 정리에 힘입어 전년말(1.42%) 대비 개선되는 등 양호한 수준
- 대손충당금적립률(대손충당금/부실채권)도 **82.9%**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보유

#### < 국내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

구 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6월
부실채권비율	1.90	1.36	1.33	1.79	1.55	1.80	1.42	1.25
대손충당금 적립률*	108.5	152.1	159.0	120.5	124.0	112.0	82.7	82.9

\* 산정기준 변경으로 ’16년말부터 총대손충당금에서 대손준비금이 제외됨

- 한편, 국내은행 수익성은 신규 부실발생 축소에 따른 대손 비용 감소, 순이자마진 상승 등으로 점차 개선되는 모습

#### <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추이(조원, %)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상반기	’17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11.8	8.7	3.9	6.0	3.4	2.5	3.0	8.1
ROA	0.66	0.47	0.21	0.31	0.16	0.11	0.27	0.71

## 보 험

- 지급여력비율 등 보험회사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
- '17.6월말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 [가용자본/요구자본]은 272.0%로 **최저기준(100%)을 상회**

### <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

구 분	'12.3말	'13.3말	'13.12말	'14.12말	'15.12말	'16.12말	'17.6말
생명보험	311.2	317.5	286.2	310.4	278.3	240.6	272.0
손해보험	289.1	284.9	261.1	256.3	244.4	227.9	251.1
계	304.3	307.8	278.4	292.3	267.1	236.5	265.1

- 금년 상반기 중 보험회사 **수입보험료**는 94.6조원(생보사 56.0조원, 손보사 38.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1조원 감소

\* '16년 상반기 수입보험료: 94.7조원(생보사 57.3조원, 손보사 37.4조원)

### < 수입보험료(조원) >

구 분	FY'11	FY'12	FY'13	FY'14	FY'15	FY'16	FY'17.6
생명보험	88.6	115.3	77.2	110.6	117.2	119.8	56.0
손해보험	57.0	64.0	49.6	68.9	72.3	75.5	38.6
계	145.6	179.3	126.8	179.5	189.5	195.3	94.6

주)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보유보험료임

- 금년 상반기 중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5.5조원(생보사 3.0조원, 손보사 2.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조원 증가

\* '16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4.3조원(생보사 2.3조원, 손보사 2.0조원)

### <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조원) >

구 분	FY'11	FY'12	FY'13	FY'14	FY'15	FY'16	FY'17.6
생명보험	3.4	3.2	2.1	3.3	3.6	2.4	3.0
손해보험	2.4	2.4	1.5	2.3	2.7	3.5	2.5
계	5.8	5.6	3.6	5.6	6.3	5.9	5.5

## 금융투자업

- **(증권사)** 국내 증권사의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

- '17.6월말 현재 **순자본비율(NCR)**은 약 **61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적기시정조치 기준(100%)을 크게 상회**

- '17.상반기 중 **당기순이익**은 1.9조원(ROE 8.0%)\*으로 전년 동기(1.2조원) 대비 약 **56%** 상승

\* IPO, 채권발행 주관 등 IB업무 관련 수수료 증가(약 +0.3조원) 및 국내외 주가 상승에 따른 파생관련손익 증가(약 +1.8조원) 등에 기인

### < 국내 증권사 주요 경영지표 >

구 분	'13.12말	'14.12말	'15.12말	'16.6말	'16.12말	'17.6말
순자본비율(%)	477	437	387	560	566	618
당기순이익(조원)	△0.2	1.7	3.2	1.2	2.1	1.9
ROE(%)	△0.5	4.1	7.3	5.4	4.6	8.0

- **(자산운용사)** '17.6월말 현재 **총 펀드 수탁고(NAV)**는 499.0조원으로 기관의 사모펀드 투자 증가 등으로 **운용규모가 확대**

- 주식형펀드의 부진, 보수율 하락 등 영향으로 **'17상반기중 자산운용사의 수익성이 다소 하락**

- 사모펀드는 **'15.10월 제도개편** 이후 부동산·실물펀드 등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운용규모가 증가**

\* 운용규모(조원) : ('13)144 → ('14)177.9 → ('15) 199.8 → ('16) 250.2 → ('17.6) 275.1

### < 자산운용산업 주요 경영지표 >

구 분	FY'13 ( '13.12말)	FY'14 ( '14.12말)	FY'15 ( '15.12말)	FY'16 ( '16.12말)	FY'17.6 ( '17.6말)
펀드 수탁고(조원)	328.4	376.1	413.6	462.4	499.0
당기순이익(억원)	3,724	4,175	4,955	6,061	2,707

## 중소금융

- (신용카드사)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조정자기 자본비율 및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 수준 유지

### < 신용카드사 주요 경영지표 >

구 분	'12말	'13말	'14말	'15말	'16말	'17.6말
신용카드사 수	7	8	8	8	8	8
총자산(조원)	82.4	86.5	92.2	97.0	104.4	105.9
당기순익(억원)	13,056	17,002	21,696	20,158	18,134	5,370
조정자기자본비율(%)	25.8	27.8	27.3	27.1	25.5	25.0
연체율(%)	1.9	1.8	1.7	1.5	1.4	1.5

- (저축은행) 업계 전반적으로 영업규모가 확대되고, 흑자 실현 지속 및 자산건전성 개선 등 경영상황 양호

### < 저축은행 주요 경영지표 >

구 분	'12.6말	'13.6말	'14.6말	'15.6말	'15.12말	'16.12말	'17.6말
저축은행 수	93	91	87	79	79	79	79
총자산(조원)	50.6	42.8	36.8	40.2	43.9	52.3	55.0
당기순익(억원)	△16,590	△11,252	△5,089	4,607	3,626	8,605	4,933
BIS 비율(%)	7.4	9.9	14.3	14.2	14.1	14.0	14.3
연체율(%)	21.3	21.3	17.6	11.6	9.2	5.8	5.1

\* 저축은행 기준 결산기는 6월말이나, FY15부터 12월말 결산으로 변경

- (신협)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율 및 순자본비율 등 건전성지표는 안정적 수준 유지

### < 신용협동조합 주요 경영지표 >

구 분	'13말	'14말	'15말	'16말	'17.6말
신협 수	942	920	910	904	901
총자산(조원)	56.7	60.5	65.8	73.7	78.5
수신(조원)	50.2	53.6	58.3	65.4	69.9
여신(조원)	33.8	37.9	43.6	52.4	56.4
당기순익(억원)	1,317	1,896	2,350	2,282	1,104
연체율(%)	5.4	3.8	2.3	1.86	2.07
순자본비율(%)	3.5	3.9	3.98	3.94	3.90

## Ⅲ.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구 분	법 률 명
금융정책 관련 (4)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기업금융 관련 (4)	·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구조개선 관련 (6)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글로벌금융 관련 (1)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은행 관련 (5)	· 은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보험 관련 (3)	·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전자금융 관련 (2)	·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중소서민금융 관련 (6)	·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관련 (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사채등록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전자단기 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16.3.22 공포 및 시행일 미정)]
회계 관련 (2)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금융정보분석원 (2)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등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계 (41)	

# 참고

## '17년도 법률 제·개정 실적

법률명	분류	공포일자	주요내용
공인회계사법	개정	'17.4.18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7.4.18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17.4.18	은행지주회사의 원활한 자본 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 마련,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 인상, 과징금 채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금의 징수기간 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17.4.18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법률명	분류	공포일자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개정	'17.4.18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7.4.18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의 하락가능성 문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과징금 채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보험업법	개정	'17.4.18	보험회사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17.4.18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법 률 명	분류	공포 일자	주 요 내 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7.4.18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 용의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 료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17.4.18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 신용협동조 합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하여 내부 감시체계 를 강화하고, 고객 응대직원을 고 객의 폭언·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한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 등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사인의 회계감사 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 인상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17.4.18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및 부가통신 업자의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 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은행법	개정	'17.4.18	은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며, 과징금 채 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한 편,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 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

법 률 명	분류	공포 일자	주 요 내 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17.4.18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기준(순자본 비율)을 변경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금융업권 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7.4.18	금융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 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 의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 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	'17.4.18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 나 거주하는 교육시설·백화점· 시장·의료시설·숙박업소·공장 ·공동주택 등의 특수건물에 화재 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 험의 담보 대상을 확대



## IV. 주요 통계

###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조원, 억달러)

구 분		'13	'14	'15	'16	'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국 내 총 생 산	GDP 성장률 <sup>1)2)</sup>	2.9	3.3	2.8	2.8	1.1				0.6		-	
	(금액, 조원)	(1,429.4)	(1,486.1)	(1,564.1)	(1,637.4)	(406.3)				(430.6)		-	
	GNI 증가율 <sup>1)2)</sup>	3.7	3.4	6.5	4.0	2.5				2.1		-	
	(금액, 조원)	(1,439.6)	(1,490.8)	(1,568.4)	(1,639.1)	(407.6)				(424.7)		-	
실 물 동 향	생산지수 증가율 <sup>2)</sup>	0.7	0.2	△0.3	1.0	1.3	6.7	3.3	1.9	0.3	△0.4	△0.2	2.7
	재고지수 증가율 <sup>2)</sup>	4.4	△2.5	3.3	△5.8	△5.8	△6.0	△5.6	△0.8	1.3	△1.7	1.8	3.5
	평균가동률	76.5	76.1	74.5	72.6	74.2	71.0	73.1	71.8	71.5	71.3	73.1	72.0
	소매판매 증가율 <sup>2)</sup>	0.7	2.0	4.1	4.3	4.1	0.5	1.2	2.6	1.4	1.1	3.5	0.8
	설비투자 증가율 <sup>2)</sup>	△0.8	5.2	6.9	△1.3	10.3	19.5	23.4	14.3	20.0	18.6	25.1	13.2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100.7	100.9	100.8	101.0	101.2	101.6	101.8	101.8
물 가 · 고 용	소비자 물가 <sup>2)</sup>	1.3	1.3	0.7	1.0	2.0	1.9	2.2	1.9	2.0	1.9	2.2	2.6
	근원인플레이션율 <sup>2)</sup>	1.5	1.7	2.4	1.9	1.7	1.7	1.7	1.5	1.5	1.5	1.5	1.4
	실업자수(천명)	807	937	976	1,012	1,009	1,350	1,143	1,174	1,003	1,069	963	1001
	(실업률)	(3.1)	(3.5)	(3.6)	(3.7)	(3.8)	(5.0)	(4.2)	(4.2)	(3.6)	(3.8)	(3.5)	(3.6)
대 외 거 래	경상수지(억달러)	811.5	843.7	1,059.4	986.8	52.8	84.0	57.5	38.9	59.4	70.1	72.6	60.6
	(상품수지)	827.8	888.9	1,222.7	1,204.5	78.1	105.5	96.2	118.2	88.3	97.1	107.1	93.1
	(서비스수지)	△65.0	△36.8	△149.2	△176.1	△33.6	△22.3	△32.7	△23.8	△16.9	△28.1	△32.9	△23.3
	자본·금융계정	△801.4	△893.4	△1,033.0	△1,043.3	△43.1	△92.1	△60.0	△18.6	△25.8	△87.5	△97.5	△91.5
	(자본수지)	△0.4	△0.1	△0.6	△0.4	0.4	0.0	0.0	△0.3	0.0	△0.3	0.2	△0.2
	(금융계정)	801.0	893.3	1,063.0	1,003.9	43.5	92.1	60.0	18.3	25.8	87.2	97.7	91.3
	- 직접투자	155.9	187.7	196.6	164.5	32.7	42.5	△5.3	13.6	6.7	12.7	4.0	15.8
	- 증권투자	93.4	306.1	495.3	663.3	47.7	8.8	23.8	27.6	55.3	29.1	32.1	114.6
	- 파생상품	△44.1	△38.3	17.9	△31.8	△3.2	△15.8	△12.1	△9.1	△4.1	△7.4	△2.2	△0.7
	- 기타투자	432.8	259.0	232.7	130.9	△36.3	58.1	47.3	△12.2	△32.8	49.8	62.6	△41.9

주: 1) 실질 GDP(금액: 명목), 실질 GNI(금액: 명목) 2) 전년동기비

## 2. 주식시장

구 분	'12말	'13말	'14말	'15말	'16말	'17년		
						7말	8말	9말
KOSPI	1,997 (9.4)	2,011 (0.7)	1,916 (△4.8)	1,961 (2.4)	2,026 (3.3)	2,403 (18.6)	2,363 (16.6)	2,394 (18.2)
KOSDAQ	496 (△0.8)	500 (0.7)	543 (8.6)	682 (25.7)	631 (△7.5)	650 (3.0)	658 (4.2)	653 (3.4)
미국 (DOW)	13,104 (7.3)	16,577 (26.5)	17,823 (7.5)	17,425 (△2.2)	19,763 (13.4)	21,891 (10.8)	21,948 (11.1)	22,405 (13.4)
일본 (NIKKEI)	10,395 (22.9)	16,291 (56.7)	17,451 (7.1)	19,034 (9.1)	19,114 (0.4)	19,925 (4.2)	19,646 (2.8)	20,356 (6.5)
중국 (상해종합)	2,269 (3.2)	2,116 (△6.7)	3,235 (52.9)	3,539 (9.4)	3,104 (△12.3)	3,273 (5.5)	3,361 (8.3)	3,349 (7.9)
영국 (FTSE)	5,898 (5.8)	6,749 (14.4)	6,566 (△2.7)	6,242 (△4.9)	7,143 (14.4)	7,372 (3.2)	7,431 (4.0)	7,373 (3.2)
인도 (SENSEX)	19,427 (25.7)	21,171 (9.0)	27,499 (29.9)	26,118 (△5.0)	26,626 (2.0)	32,515 (22.1)	31,646 (18.9)	31,730 (19.2)
홍콩 (HS)	22,657 (22.9)	23,306 (2.9)	23,605 (1.3)	21,914 (△7.2)	22,001 (0.4)	27,324 (24.2)	27,970 (27.1)	27,554 (25.2)
시가총액 (조원)	1,263.4 (10.1)	1,305.3 (3.3)	1,335.3 (2.3)	1,444.5 (8.2)	1,510.0 (4.5)	1,779.6 (17.9)	1,759.2 (16.5)	1,783.1 (18.1)
고객예탁금 (조원)	17.1 (△1.7)	13.9 (△18.7)	16.1 (15.8)	20.9 (29.8)	21.8 (4.3)	24.3 (11.5)	23.3 (6.9)	23.1 (6.3)
주식형펀드 (조원)	94.6 (△9.2)	85.5 (△9.6)	79.3 (△7.3)	81.4 (2.6)	73.7 (△9.5)	69.9 (△5.2)	70.0 (△5.0)	71.6 (△2.9)
(국내 펀드)	68.5 (△5.8)	65.8 (△3.9)	63.4 (△3.6)	63.6 (+0.3)	55.9 (△12.1)	52.3 (△6.4)	52.7 (△5.7)	54.0 (△3.5)
(해외 펀드)	26.1 (△17.1)	19.7 (△24.5)	15.9 (△19.3)	17.8 (11.9)	17.7 (△0.0)	17.6 (△1.1)	17.3 (△2.8)	17.6 (△1.0)
외국인순매수 <sup>1)</sup> (십억원)	17,522	5,214	5,867	△3,909	12,357	9,956	8,357	7,267
기관순매수 <sup>1)</sup> (십억원)	3,630	4,801	△898	△702	△9,680	△9,244	△7,785	△6,851
개인순매수 <sup>1)</sup> (십억원)	△14,358	△6,260	△2,560	1,975	△2,858	△2,343	△2,706	△2,796

주: 1) 연중 순매수액 2) ( )내는 전년말대비 변동률(%)

### 3. 주요 금리

(단위 : %)

	'13말	'14말	'15말	'16말	'17년			'16말대비
					7말	8말	9말	
미국 LIBOR(3Mo)	0.25	0.26	0.61	1.00	1.31	1.32	1.33	+34 bp
미국 T/Bill(3Mo)	0.07	0.05	0.17	0.50	1.08	0.99	1.04	+54 bp
미국 T/N(5년)	1.75	1.65	1.76	1.93	1.84	1.70	1.94	+1 bp
미국 T/N(10년)	3.04	2.17	2.27	2.44	2.29	2.12	2.33	△11 bp
국고채(10년)	3.58	2.60	2.08	2.07	2.23	2.26	2.38	+31 bp
국고채(5년)	3.23	2.28	1.81	1.80	1.93	1.97	2.09	+29 bp
국고채(3년)	2.86	2.10	1.66	1.64	1.72	1.75	1.89	+25 bp
은행채(3년,AAA)	3.14	2.28	1.84	1.85	1.91	1.95	2.10	+25 bp
회사채(3년,AA-)	3.29	2.43	2.11	2.13	2.26	2.30	2.43	+30 bp
회사채(3년,BBB-)	8.98	8.27	8.06	8.27	8.50	8.55	8.67	+41 bp
통안증권(2년)	2.81	2.10	1.65	1.64	1.63	1.68	1.80	+17 bp
통안증권(1년)	2.69	2.09	1.63	1.56	1.43	1.48	1.54	△2 bp
KORIBOR(1년)	2.78	2.18	1.74	1.67	1.59	1.65	1.74	+7 bp
통안증권(91일)	2.56	2.07	1.56	1.39	1.26	1.26	1.28	△11 bp
CD(91일)	2.66	2.13	1.67	1.52	1.39	1.38	1.38	△14 bp
CP(91일)	2.88	2.32	1.91	1.70	1.58	1.58	1.58	△12 bp
KORIBOR(3개월)	2.66	2.14	1.66	1.47	1.37	1.35	1.37	△10 bp
콜금리(익일물,전체)	2.52	2.03	1.52	1.27	1.24	1.27	1.27	- bp

### 4. 주요국 환율 변동

(단위 : 원, US\$, JPY)

	'12말	'13말	'14말	'15말	'16말	'17년		
						7말	8말	9말
₩ / US\$	1,070.5 (△7.1)	1,055.4 (△1.4)	1,099.3 (+4.2)	1,172.5 (+6.7)	1,207.7 (+3.0)	1,119.0 (△7.3)	1,127.8 (△6.6)	1,145.4 (△5.2)
US\$ / EUR	1.3192 (1.8)	1.3743 (4.2)	1.2098 (△12.0)	1.0856 (△10.3)	1.0520 (△3.1)	1.1842 (12.6)	1.1910 (13.2)	1.1814 (12.3)
JPY / US\$	86.75 (12.8)	105.31 (21.4)	119.68 (13.6)	120.06 (0.3)	117.00 (△2.6)	110.26 (△5.8)	109.98 (△6.0)	112.53 (△3.8)

주: ( )는 전년말대비 변동율(%)